

## “당당히 맞설 것”… 민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 “없는 죄 조작한 사법 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전 “특권을 비판 바도 잘못한 것도,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끓어내겠나”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현정사 최초의 아당책임자 소환이어서 아니라 이미 수년 간 수사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끌어내 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 기업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 시민 세금을 아끼 일이 비단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했다.

그는 “성남시 소유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끄러져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모를 리가 있나. 그런데도 왜곡, 조작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직법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서로 엮어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 ‘정적 제거 수사 외 설명 길 없어

### DJ · 노무현 당한 게 리스크였나

### 여주행 이기자, 역사 변곡점 기록”

하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이 예산을 아끼려 종별회를 저지르더 했다는 게 상상이 가나”라고 개탄했다.

또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

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정치 탄압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면 서 “이 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나”라고 토로했다.

또 “그간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검찰 쿠데타였다”며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젠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무리한 정권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 단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고도 했다.

더불어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시를 해도 지방자치가 막기지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뉴스

하나의 청탁으로 정치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로 정치를 저지르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예산부민들에게 열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특혜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훈수조차성이 협약서에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단 한 번도 훈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약정된 수익률을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훈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챕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신설부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시장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복 조치리기보다는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 ‘올해 기업유치 본격화’

### 새만금청 새해 업무계획

#### 기업 투자 · 마케팅 활동 전개

#### 주요 도시 · 개발계획 내실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1.0 시대를 넘어, ‘기업유치 본격화’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한해동안 신단 입주계약 총 50건 중 42%에 달하는 21건을 체결하며 역대 최대의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 2년여 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되던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원료제 지역의 오랜 바램이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법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감면(최초 3년 100%, 2년 50%)해 줄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중심거점을 연결하는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예타 통과 2개월 만에 올해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이 국제 투자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활력 있는 도시 조성 기반 마련, 개발 가속화 등(모멘텀)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부지진흥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해 새만금개발법 시행과 동시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즉시 지정(7월)하고, 활발한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 이치전지, 교통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으로 불리는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 검찰, 정현율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 ‘허위사실공표’ 혐의… 정 시장 측 ‘무죄’ 주장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율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를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시장은 “민사소송일 경우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됐을 때 이 혐의서를 놓고 과연 초과수익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며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당시 1차적 판단기반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의없음을 처분을 받았고, 후보자 토론회 특성상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하위로 표현했더라도 사후검증을

사후검증도 어려웠고,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일 경우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됐을 때 이 혐의서를 놓고 과연 초과수익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며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당시 1차적 판단기반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의없음을 처분을 받았고, 후보자 토론회 특성상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하위로 표현했더라도 사후검증을

통해서 도태되도록 해야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예산부민들에게 열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특혜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훈수조차성이 협약서에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단 한 번도 훈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약정된 수익률을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훈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챕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신설부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시장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복 조치리기보다는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 주요 업무보고 · 일반안건 심사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10일 제 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신속히 공사를 헌층 더 기속화하고 수출·입 물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새만금과 주요 거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철도·공항·항만 등 트라이포트(Tri-pot) 구축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신반기 개최하고, 하반기에

신속히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는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간이 되었다. 올해에는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으로 불리는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두기자

## 남원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화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민정일치로 채택했다.

전평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불안한 국제정세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토심금의 지혜를 발휘하여 불화설성과 위협을 철저히 대비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화 및 창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임대인 지원 조례안·임대인 지원 조례안·임대인 지원 조례안·임대인 지원 조례안·임대인 지원 조례안·임대인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제정 촉구 건의안을 민정일치로 채택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